

의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2020.06.05. 제1기 전국운영위원회 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의제기구의 설치와 운영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위와 설치) ① 각 의제운동의 형성과 강화 및 당과의 유기적 결합을 위해 공동대표는 의제기구를 둔다.

② 의제기구는 공동대표가 설치와 해산을 하고 전국운영위원회가 인준하며, 인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당의 강령에 위배되지 않는 의제
2. 당헌·당규 및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위배되지 않은 규약
3. 타 의제기구와 중복되지 않는 권리당원 20인 이상의 회원
4. 공동대표가 임면하고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의제기구의 장

제3조(구성) ① 의제기구의 명칭은 “○○○본부”라고 칭한다.

② 의제기구를 대표하고 집행을 책임질 대표자를 두고, 의제기구의 장은 본부장이라고 명한다. 본부장은 공동대표가 임면하고 전국운영위원회가 인준한다.

③ 의제기구의 대표자는 규약을 제정하여 상세한 의제기구 내부 방침을 정한다.

④ 의제기구의 집행기관 및 의결기관 등 조직 구성은 의제기구 규약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되, 당의 강령 및 당헌·당규와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.

⑤ 의제기구의 초동 구성은 타 의제기구에 중복 가입되지 않은 권리당원 20인 이상으로 한다. 당원은 복수의 의제기구에 가입할 수 있다. 단 의제기구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의제기구에 중복 가입되지 않은 20인 이상의 권리당원을 초동 구성원으로 확보해야 의제기구 설치 인준이 가능하다.

⑥ 의제 관련 사회단체 활동가 및 전문가 등 비당원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.

제4조(사고의제기구 판정) ① 전국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사고 의제기구 판정과 직무대행자 지정 권한을 가진다.

1. 의제기구 대표자가 결위되었으나 권한을 대행할 자가 없거나 규약으로 정한 기한 내에 후임자 선출을 진행하지 않

는 경우

2. 의제기구 대표자에 대한 당원 소환이 발의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절차를 집행하지 않는 경우

3. 의제기구의 대표자 또는 의결기관이 당의 강령, 당헌·당규를 위반하여 당의 권위와 명예를 중대하게 실추시킨 경우

② 본 조 제1항에 의한 사고로 의제기구가 정상화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전국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해 의제기구 설치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효력) 본 당규는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때부터 효력이 있다.